

경선연기 놓고 친문 對 이재명계 총돌... '룰의 전쟁' 개막하나

침묵 깬 이재명계 “패배 앞당기는 길...원칙 지켜라” 전재수 “특정인 배제도, 계파 총대 맨 것도 아니다” 송영길 지도부로 쏠리는 눈...“서둘러 교통정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할 송영길 지도부가 꾸려졌지만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탓이다.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당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내홍만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논쟁은 여권 잠룡인 김두관 의원과 친문 전재수 의원이 지난 6일 나란히 경선 연기를 꺼내들고, 이에 친문 주류와 맞대응을 삼가던 이재명계 의원들이 침묵을 깨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TBN(경인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보다 일찍 뽑힌 여당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두 달 차이인데, 원래 공격받을 만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공격받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원래 과거에 굉장히 혹독하게 검증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호남 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도 “경

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냐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핑계로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상책이 아닌 하책이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며 “이 지사와 상의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경선 연기를 공개 주장했던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특정 주장을 배제시키고 (후발 주자들) 양성할 목적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서도 “집권전략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경선을 연기하는 게 집권하는데 도움이 될지, 또 도움되지 않을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친문 전재수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원”이라며 “누구를 띄우고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보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다시 맨다든지, 이렇게 정치하지

않는다”면서 친문의 이 지사 견제 목적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나아가 “결국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과정처럼 국민의 힘, 경쟁하는 상대당에 굉장히 압도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고민하는 의원들이 당내 다수의 기류라는 주장도 됐다.

경선 연기를 놓고 총돌한 양 측은 일제히 송영길 지도부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계 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런 논란이 더는 뜨거워지지 않도록 일제히 송영길 지도부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계 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런 논란이 더는 뜨거워지지 않도록 일제히 송영길 지도부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광주 방동자리에서 “지금쯤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그런 고민은 아직 안 한다. (당직) 인선도 덜 끝났다”며 “정비가 된 다음에 차분히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논쟁에 끌려들면 끌려들 수록 취임 초 강력한 권한으로 쇄신을 주도할 ‘당대표’의 위치보다 대선주자들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심판’의 면모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당무에 들어가려던 스텝이 꼬인 셈이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더는 미루기도 어렵다. 대선 180일 전 선출 규정에 맞춰 오는 9월 초 대선후보를 확정지으려면, 늦어도 6월부터는 예비 경선에 들어가야 한다. 제반 절차를 준비할 경선기획단도 이달 중에는 꾸려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송영길 지도부가 조속한 시일 내 경선 일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경선 연기가 실제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당헌 개정 없이도 당무위 의결로 선거일을 탈

리할 수 있는 셈이다.

전 의원도 해당 조항을 제시하며 “당헌당규 개정사항이 아니고 당무위의 결사사항이다.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상당한 사유’는 물리적으로 대선 경선을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이낙연 지도부 시절 경선 연기를 불거졌을 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당무위 의결을 통한 경선 일자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박광은 당시 사무총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헌의 단서조항은 불가항력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선 연기 이후가 더 험로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합의된 날짜를 고친 이상 경선 룰을 놓고도 유희리를 따지는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 이합집산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룰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파장은 견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마지막 취임 기념연설 앞둔 文대통령

퇴임 1년 앞두고 국정 과제 재차 밝히고 실현 구상 가다듬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임기 중 마지막 취임 기념 연설과 회견 준비에 전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대비용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매진할 국정 과제를 국민들 앞에 재차 밝히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구상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정 목표를 재확인하고 실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구상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설 뒤 문답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 가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도전할 것이 많다”며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주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취임 기념행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서 취임 5주년은 곧 퇴임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주년 기념 특별연설도 3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춘추관에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태로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참석 기자들을 통한 현안 질의가 이어진다. 기자단을 매개로 문 대통령과 국민이 간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60분 간 생중계 된다.

김회재, 아동 오염 방지 위한 화학제품 유사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어린이 오염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블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

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장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근거는 없었다”면서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 주무기관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월영령 앞 무릎 꿇는 이낙연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